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2023. 5. 2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배경	1
II. 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내용	2
III. 우리기업 영향 및 대응현황	4
IV. 지원방안	7
1. ESG 수준 향상을 위한 진단·컨설팅 강화	8
2.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보기반 마련	10
3. 실사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자금여건 개선	12
4.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14
V. 향후 추진계획	16

I. 추진배경

◇ 공급망 내 ESG 필요성에 따라 EU 차원의 통합적 실사지침 마련

-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보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EU 회원국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관련 개별법** 시행 중

* 나이키 하청업체 아동 노동 착취('96), 의류 하청업체 라나플라자 공장 붕괴('13) 등

** (佛)기업경계법('17), (네덜란드)아동노동 실사법('22), (獨)공급망 실사법('23) 등

- EU 차원의 통합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급망 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추진

* EU 집행위 초안('22.2) → 이사회 수정안('22.11) → 의회 표결('23.上) → 3자 협의 → 최종안('23년말 예정)

◇ 수출기업 중심 상당한 영향 우려되나, 준비 부족한 상황

- 실사 의무는 EU 역내뿐 아니라 역외기업에도 적용되고 공급망 전반에 대해 의무화하여, 수출기업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 우려

* 對EU 수출 국내기업은 약 18,000여개(대기업 527, 중견 1,181, 중소기업 16,206)

- 국내 기업은 전반적으로 준비 미진*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

* 원청기업 48.2%, 협력업체 47%가 대응조치 없다고 응답('23.2, 대한상의)

◇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기업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방안 마련

- 그간 정부는 글로벌 ESG 확산 움직임 속에 우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22.12)」 등 추진

*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 경영지원, 투자 활성화, 정보·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

⇒ 시급한 현안인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방안 마련

II. EU 공급망 실사지침(이사회안)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원청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실사 의무 부과**

○ **(적용대상)** 거점지역에 따라 역내·외로 분류하고, 기업규모 (직원 수, 매출액), 고위험산업* 해당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

* 환경·인권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 농림·어업, 원자재 등(실사지침)

구분		그룹①	그룹②	초우량기업
역내	직원 수	500명 초과	250명 초과	1,000명 초과
	매출액	전세계 1.5억 유로 ↑	전세계 4천만 유로 ↑ (50%이상 고위험군에서 발생)	전세계 3억 유로 ↑
역외	매출액	EU내 1.5억 유로 ↑	EU내 4천만 유로 ↑ (50%이상 고위험군에서 발생)	EU내 3억 유로 ↑

○ **(의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관리

- ① 기업 정책에 공급망 실사 반영
- ② 인권·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및 평가
- ③ 부정적 영향 예방·제거·최소화
- ④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사이행 결과 보고(매년 1회 이상)

○ **(실사 항목)** 인권,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대해 실사

- * 1) 인권 : 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
 2) 환경 :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
 3) 기후변화 : 파리협정 목표(상승 1.5도 제한) 달성을 위한 사업전략 등(그룹1만 해당)

○ **(책임·제재)** 원청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미준수*로 손해 발생 시 원청기업에 민사 책임 부과 가능

* ①자연인/법인의 법적 손해, ②의무 위반, ③손해와 의무 위반 간 인과, ④잘못(의도성 등)

- 또한, 감독기구는 기업 매출액 등에 비례한 벌금 부과 가능

○ **(적용시점)**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국내법 제정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3~5년* 내 적용

* (그룹①) 지침 발효 4년 후, (그룹②) 5년 후, (초우량기업) 3년 후

※ [참고1] EU 기구별 실사지침 및 회원국별 실사법

◇ EU 기구별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내용

구분	EU 집행위('22.2)		유럽의회 보고서 초안('22.11)		EU 이사회('22.12)
적용 범위	EU 역 내 기 업	【그룹 1】 · 직원 500인 초과 ·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그룹 2】 · 직원 250인 초과 · 전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 매출액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그룹 1】 · 직원 250인 초과 · 전세계 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그룹 2】 · 직원 50인 초과 · 전세계 매출액 8백만 유로 초과 · 매출액 30% 이상이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 적용 범위는 집행위(안)과 동일 · 다만, 단계적 접근 방식 도입			
	EU 역 외 기 업	【그룹 1】 · EU內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그룹 2】 · EU內 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 매출액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그룹 1】 · 전세계 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그룹 2】 · 직원 50인 초과 · 전세계 매출액 8백만 유로 초과 · 매출액 30% 이상이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 지침 발효 3년 후 (역내) 직원 1,000명 · 전세계 순매출액 3억유로 초과 (역외) EU內 순매출 3억유로 초과			
적용 시점	지침 발효 후 【그룹 1】 : 2년, 【그룹 2】 : 4년 후 적용				지침 발효 후 【그룹 1】 : 4년 【그룹 2】 : 5년 후 적용

◇ EU 회원국별 공급망 실사법 주요 내용

국가	법령	주요 내용
영국	현대노예법 ('15~)	· 대상기업 : 총매출액 3,600만 파운드 이상 기업 · 적용범위 : 노예제 · 인신매매 · 강제노동 등 노동에 한정 · 감독 : 온라인 성명서 발표, 위반시 개인은 최대 종신형 · 기업은 벌금 등 부과 가능
프랑스	기업경계법 ('17~)	· 대상기업 : 프랑스 내 임직원 5,000명 내지 전세계 10,000명 이상 · 적용범위 :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등), 환경 등 · 감독 : 기업 실천계획 · 이행보고서 작성해 기업연차보고서 등에 공시(단, 법정감사는 받지 않음)
네덜란드	아동노동 실사법 ('22~)	· 대상기업 : 네덜란드 내 모든 기업 및 법인 · 적용범위 : 아동노동에 한정 · 감독 : 기업 아동노동 근절 및 예방에 대한 성명서 제출, 위반시 82만 유로 또는 최대 전세계 매출액 10% 벌금 부과
독일	공급망 실사법 ('23~)	· 대상기업 : 임직원 3,000명 이상('24년부터 1,000명 이상) · 적용범위 :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등), 환경 등 · 감독 : 기업 공급망 실사보고서 제출, 보고서 검증 및 실사결과 환경·인권 침해시 연매출액 2% 벌금 부과 및 공공조달에서 제외

Ⅲ. 우리기업 영향 및 대응현황

[1] 영향

◇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직·간접 영향 우려

- 對EU 수출이 많은 자동차·부품 업종* 등을 중심으로 중소·중견을 포함한 상당수 국내기업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
* 對EU 수출금액('22) : 681억불, 주요 수출품목('22) : 승용자동차, 선박, 차량부품 등
- 또한, 수출기업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내 실사 대상으로 수출기업 공급망 전반에 걸친 협력업체도 간접 영향권

◇ 공급망 실사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 발생 예상

- **(대기업)** 주로 원청기업으로 공급망 실사 이행 비용*, 실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소송** 부담 발생 가능
* 데이터 관리·인력 구성 등 내부체계 정비, 설비 구축 등
** (사례) 프랑스 에너지기업(Total), 수자원 기업(Suez) 등 기업경계법('17 시행) 위반 사례에 대한 재판 진행 중
- **(중소기업)** 주로 협력업체로 실사 대응을 위한 비용·인력 부담, ESG 성과가 낮은 중소기업은 공급망 배제위험*도 존재
* (BMW) 3년 평균 150여개사, (GE) '20년 기준 71개사 공급망 배제
- 또한, 공급망 실사에 따른 비용 증가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등 원청기업의 실사책임 전가 우려

[2] 대응 현황

◇ [대기업] 대부분 공급망 관리 중이나, 현장 실사는 제한적

- 주요 대기업 대부분 ESG 경영 일환 등으로 공급망 관리* 중

* 대기업 75개사 중 57개사(76%)가 협력사 ESG 경영 관리 중('22, 경총)

- 기업별 자체 마련한 관리지표*·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하고, 거래 시 평가 결과 반영**

* 이해관계자 요구 등을 고려, ESG 영역별 지표를 개발하여 협력사 관리

** (인센티브) 물량증대, 물량우선권, (패널티) 물량축소, 입찰제한, 거래정지

- 협력사 행동규범*도 운영 중이나, 현장 실사는 제한적

* 협력사의 ESG경영 책임을 명시한 행동규범 제정하여 자발적 준수 요청

◇ [중소기업] 실사 대응을 위한 준비 부족

- 공급망 실사 등으로 인한 ESG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협력업체 절반(47.0%)은 별도 조치 없는 상황*

* 협력업체 47%가 대응조치 없다고 응답('23.2, 대한상의)

- 주로 외부기관을 통한 진단·컨설팅으로 대응* 중이며, 실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등 담당 인력은 부족

* 공급망 실사 대응방법('23.2, 대한상의) : 진단·컨설팅(39.3%), 대응조직(13.7%) 등

- ESG 수준은 외부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선하는 경향이 있어 기업 간 편차가 크며, 요구 수준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

* 협력사 36.1%가 '거래처 ESG 요구수준 충족 어렵다'고 응답('22.11, 중기중앙회)

※ [참고2] 업계 및 전문가 주요 건의내용*

* 전문가 간담회(3.10일, 3.30일), ESG 정책포럼(4.11일)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원청기업 협업) 원청기업 공급망 중심으로 ESG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원청기업과 협업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 필요
 - 원청기업별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 패키지* 등을 구축하여 다업종·소규모 지원의 한계 극복
 - * 수출 대기업-1차 협력사(중견)-2차 협력사(중소)를 묶어 지원
 -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소통채널을 통해 무리한 정보 요구 등에 따른 피해 사전 방지
- (중복실사 부담) 복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다수의 유사중복 평가를 받아야하는 부담에 대한 방안 마련
- (플랫폼) 개별 기업별 ESG 대응부담 경감 등을 위한 통합DB 플랫폼, 중소·중견기업 정보공개 플랫폼 등 구축
- (가이드라인) 광범위한 기존 K-ESG를 고도화하고, 업종·규모별 세분화된 정보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필요
 -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내 법·규정 등에 기반한 공급망 실사가 EU 협정 등을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되도록 노력
- (인식 제고) 업종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ESG 인식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임원 중심의 ESG 인지도 강화 필요
- (인력 지원) 기업의 ESG 인력 부족, 미스매칭 해결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인턴십 프로그램 마련

IV. 지원방안

기 본 방 향

우리 기업의
실사 대응력 확보 및 ESG 역량 강화

공 급 망 실 사 대 응 지 원

진단·컨설팅 강화

- ✓ 컨설팅 제공
- ✓ 수준진단 고도화
- ✓ ESG 인식 확산

정보기반 마련

- ✓ 실사대응 플랫폼 마련 추진
- ✓ 기존정보 정비 등 활용성 제고
- ✓ 맞춤형 가이드선스 제공

인력·자금여건 개선

- ✓ 종합지원단 운영 추진
- ✓ 대응인력 양성
- ✓ 금융 지원

원청·협력업체 협업체계 구축

- ✓ 협업체계 조성
- ✓ 네트워크 운영

1

ESG 수준 향상을 위한 진단·컨설팅 강화

- ▶ 정책자금 다음으로 진단·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22.6, 중진공)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 대상 정부지원 필요항목】

정책자금	진단·컨설팅	평가비용	가이드라인	역량강화 교육	기타
24.3%	22.2%	17.0%	16.6%	11.7%	8.1%

□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업종별 컨설팅 등 제공

- (업종별 컨설팅) 원청·협력업체 간 유기적 대응을 위해 개별 기업이 아닌 원청기업 단위의 업종별 컨설팅 추진('24~) 산업부
 - 對EU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 선정하되, 원청기업 (대기업)과 1차(중견기업)·2차 협력사(중소기업)를 패키지로 지원
 - 업종별 실사 이슈 등을 고려, 업종 실정에 부합하도록 제공
- (실사대응 컨설팅) 수출기업(500개社) 대상 현장실사 등을 포함한 실사 쏠단계* 맞춤형 컨설팅 제공('23~) 산업부
 - * 1)대상 선정 및 지표 설계, 2)서면진단·현장실사, 3)인센티브·후속지원 등
 - 특히, EU수출 일정규모 이상의 예상 대상기업은 의무사항 및 개선 조치에 대한 심층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컨설팅) 환경데이터 관리, 친환경 공정개선 등 환경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분야(E) 컨설팅 제공('23~) 환경부
 - 공급망 내 근로자 처우 및 안전 개선 등을 위한 사회분야(S) 컨설팅 제공('24~) 고용부
- (민간 연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 등과 연계하여 ESG 경영전략 수립 지원('24~) 중기부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선 등을 통한 수준진단 고도화

- **(자가진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글로벌 거래기업 대상의 특화지표* 추가, 산업별 가중치 적용 확대**('23.下) 중기부

* 글로벌 기업의 환경, 노동·인권 관련 평가 항목 등 반영

** (기존) 환경분야(E)에만 적용 → (개선) 사회(S)·거버넌스(G) 분야에도 적용

【자가진단 고도화(안)】

ESG 체크리스트 1.0 이전 ■ 공통지표 - 23개(E10, S7, G6)	ESG 체크리스트 2.0 현재 ■ 공통지표 6개 추가 ■ 특화지표(대기업, 수출국가) 추가	ESG 체크리스트 3.0 고도화 ■ 특화지표(대·중견기업) 확대 ■ 특화지표(글로벌 기업) 추가
ESG 자가진단 1.0 이전 ■ 트랙 1개(일반) ■ 맞춤 솔루션 제공(모듈형)	ESG 자가진단 2.0 현재 ■ 산업별 가중치 적용(E) ■ 비교 데이터 제공	ESG 자가진단 3.0 고도화 ■ 산업별 가중치 적용(E/S/G) ■ 진단 통계시스템 강화

- **(심층진단*)** 자가진단 DB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심층진단 절차·시스템 고도화 추진('23.下) 중기부

* 자가진단 완료 기업 대상,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수준 측정 및 개선과제 발굴

□ 임원 대상 교육, 우수기업 포상 등을 통한 ESG 인식 확산

- **(인식 교육)** ESG 경영은 글로벌 공급망 배제 등 기업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 내재화를 위한 중기 CEO 대상 교육*('22~) 중기부

* K-기업가정신센터(중진공) 활용, '23년 2,200명 교육 목표(전년比 10%↑)

- 또한, 온라인 교육 및 직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23.下) 환경부

- **(우수기업 포상)** 지속가능 경영유공, 경영혁신대전 등을 통한 기업의 ESG 우수사례 포상 및 사례집 발간('22~) 산업부·중기부

- **(이니셔티브 워크숍)** 공급망 ESG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RBA 등) 대응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23.下) 환경부

- **(정부지원 우대)** 중기부 지원사업(11개) 선정시 ESG 우수기업 가점 부여, ESG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 우선 승인('23~) 중기부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시행('23.5~)

2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보기반 마련

현장의
목소리

- ▶ 대다수 중소기업이 실사 대상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 ▶ 복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다수의 유사중복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 호소(중소·중견기업 간담회 참석자 발언)

□ 중복실사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실사대응 플랫폼 마련

- 실사 대상인 협력업체가 경영정보 등을 입력하면 원청기업이 열람 가능한 ‘실사대응 플랫폼*’ 마련 추진(‘24~) 산업부

* 기존의 K-ESG 온라인 플랫폼(산업부) 등 활용

- 이를 통해 유사한 자료 제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부담을 경감하고, 대기업의 실사 이행부담*도 완화

* 협력업체의 ESG 데이터 수집 시 상당시간 소요 등

【실사대응 플랫폼 운영체계】



□ 기존정보 정비 등을 통한 정보 활용성 제고

- (기존정보 정비) 공급망 실사 관련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산재된 관련 정보를 정비하여 별도 제공(‘24~) 산업부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ESG 관련 다수의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 정비 로드맵’ 수립 추진(‘24~) 기재부

<참고> ESG 관련 플랫폼 현황

ESG포털(KRX)	K-ESG 온라인 플랫폼(산업부)	ESG 통합플랫폼(중진공)
기업 ESG 등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펀드·채권 현황 ESG 뉴스, 최신 동향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정책정보 KESG 가이드라인 기반 자가진단 관계부처 정보	ESG 진단 시스템 ESG 사업운영 시스템 통계 관리, 정책 건의 정보제공

- **(추가 정보제공)** EU 회원국별 실사법에 따른 적용 대상 기업, 준수 의무, 위반시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24~) 산업부
- **(환경관리 시스템)** 중소기업 취약부문*인 환경 분야 대응력 제고를 위해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24~) 환경부
 - * 중소기업 자가진단 결과, 환경→거버넌스→사회 순으로 취약('22, 중진공)
- 환경법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규제 알람 및 법규 위반 처분사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실사 대응 가이드북 등 맞춤형 가이드스 제공

- **(K-ESG 가이드라인*)** 진단·컨설팅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지속 활용('23~) 산업부
 - * K-ESG 가이드라인 제정('21.12),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 발표('22.12)
 - ** 산업별 이니셔티브 및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ESG 진단·실사 공통 항목 선정
 - 산업별 경영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제공을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23.下, 산업부)
 - * 4개 업종(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 **(가이드북)** 공급망 ESG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응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23.下) 환경부
 - 또한, EU 수출기업을 위한 지침 주요내용, 대응 요령 등을 담은 'EU 공급망 실사 대응용 가이드북' 마련('24) 산업부
- **(경영안내서)** 실태 조사에 기반한 ESG 실천항목을 담은 경영안내서 제작·배포('23.下) 중기부
 - * 이해편, 솔루션편(21.11) → 수출편('22.12) → 글로벌, 대기업편('23.下)
- **(해외 법·규정 번역)** 대상 기업이 적의 대응할 수 있도록 EU 실사지침 및 회원국별 국내법에 대한 국문 번역본 제공('24~) 산업부

3

실사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자금여건 개선

- ▶ 공급망 실사 주요 애로요인은 자금·인력이라고 응답('21, 중진공 설문조사)

현장의
목소리

【공급망 실사 경험 중소기업의 애로 요인】

자금	인력	제도	인증	ESG 경험	기술 등
22.5%	16.9%	12.4%	11.2%	10.1%	27.0%

□ 중소기업 인력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지원단 운영

- 인력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사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종합지원단' 운영 검토('24~) 중기부

-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존한 기존 정부지원 사업*과 달리 대상기업 선제 발굴, 민관합동 전문가 투입하여 밀착 지원

* (기존) 중소기업 스스로 문제점 파악 → 부처·기관별 개별 사업 신청
(개선) 지원단 방문 → 전문가 상담 → 수요자 맞춤형 진단 및 처방

「ESG 민관합동 종합지원단」 운영 개요



■ 애로상담 및 ESG 진단

- 애로상담 창구 운영(연중)
- ESG 심층 진단

■ ESG 대응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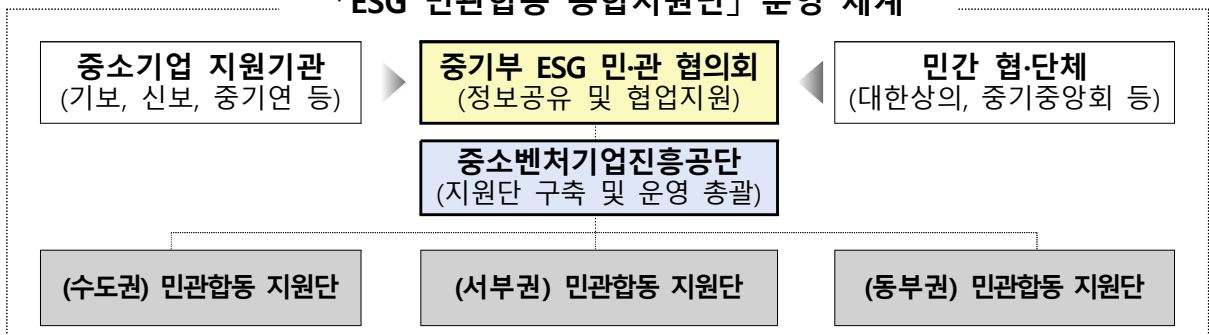
- 실사대응 전략 수립 등
- ESG 관련 인증 취득

■ 인력 양성

- 中企 내부 전문가 양성
- 지역별 특화산업 ESG 연수

- 3개 권역(수도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구분된 지역거점센터(36개소)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ESG 민관합동 종합지원단」 운영 체계



□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한 **대응인력 양성**

- **(인턴십)** 기업의 ESG 인력 부족 해소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실무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24) 산업부
 - * 채용 설명회 개최, 기업-인력 간 매칭프로그램 운영,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
- ESG 전담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시 운영하여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ESG 인력의 실무경험 제고
-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급망 실사 교육과정 등을 개발·운영하고, 민간 자격 부여 등 과정 인증 추진(‘24) 산업부
 - 실사 모의대응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23.下) 환경부

□ 금리 우대 프로그램, ESG 전용 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

- **(자금)** ESG 경영 우수기업에 금리·한도 우대(5대 은행) 중기부 및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12개 은행) 지속 환경부
 - * 환경성 평가체계에 따라 환경성을 평가하여 우대 금리 제공
- ‘공급망 실사’ 진단 결과 우수기업도 우대 대상에 추가 검토

【 5개 은행 금리 및 한도 우대 】

구분	KB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하나
상품	KB Green Wave	NH 기업성장론	우리 ESG 혁신기업대출	신한 ESG 우수상생지원 대출	
대상	ESG 자가진단 참여기업	ESG 자가진단 참여기업 중 E분야 1등급 획득기업	ESG 자가진단 참여기업 중 E분야 3등급 이상(1~3등급) 획득기업	ESG 자가진단 참여기업 중 E분야 2등급 이상(1~2등급) 획득기업	23년內 상품 출시
제공내용	최대 0.4% 금리 우대, 한도 우대	0.1% 금리 우대	0.1% 금리 우대 한도 우대	0.2% 금리 우대	

- **(투자)** 모태펀드 기반 민관 공동출자로 ESG 전용 펀드 조성 중기부
 - ESG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 투자조합에 출자(‘22.12, 200억원 결성)

4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현장의
목소리

- ▶ 수출기업 절반 이상이 ESG 미흡으로 계약 파기될 가능성 높다고 응답('22, 대한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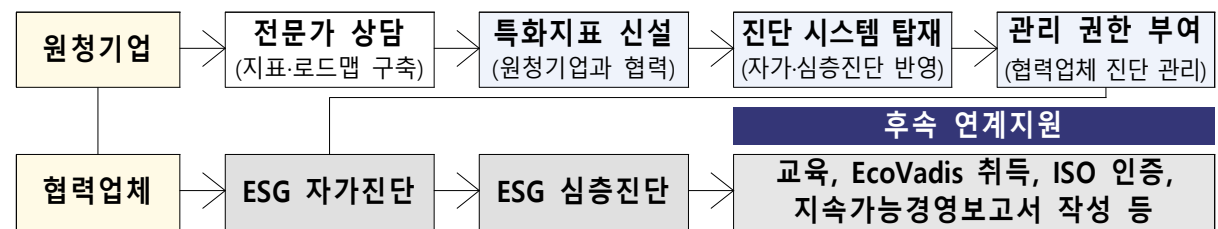
【ESG 미흡으로 인한 계약 파기 가능성】

매우높음	다소높음	다소낮음	매우낮음
0.7%	51.5%	40.2%	7.6%

□ 공동대응 프로세스 등을 활용한 협업기반 조성

- **(공동대응 프로세스)** 실사 주체(원청기업)와 실사 대상(협력업체) 간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공동대응 프로세스 구축('23~) **중기부**
 - 원청기업의 특화지표 개발을 지원하고, 협력업체는 원청기업의 특화지표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적합한 개선과제 발굴
 - ※ SK시트론 협력업체 123개사 지원 예정('23.5, 업무협약 체결)
 - 또한, 글로벌 평가기관(Ecovadis) 인증 취득 등 후속지원과 연계

【공급망 실사 공동대응 프로세스】



- **(상생협력 MOU)** 대기업과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MOU'를 체결*하여 협력업체 대상 온실가스 저감 등 컨설팅 지원('23~) **환경부**
 - *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46개사 지원 중
- **(원하청 상생협약)** 공급망 내 근로자 권리 보호·처우 개선 등을 위한 원하청 협력활동* 활성화('23~) **고용부**
 - * 이종구조 해소를 위한 업종 단위의 상생협약 확대('23, 조선업)
- ESG 사회분야 사업 우대, 협력업체의 처우 개선 노력에 대한 조달 가점 부여 등 검토

□ 긴밀한 소통·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 (상시 소통채널) 원청·협력업체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업종별 사업자단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상시 소통채널 구축(‘24~) 중기부
 - 과도한 실사이행 등에 의한 마찰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신속 해소 지원
 - * 무리한 정보공개 요구, 불공정한 시정 요구 등
 - 또한, 경제단체별 실사 관련 협의체 동향 공유, 지원 사업 벤치마킹 활성화 등을 위한 경제단체 네트워크 등 운영
- (협력 네트워크) 산업별 긴밀한 협력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 포럼’을 지역·권역별 산업 단위로 확대 개편(‘23~) 산업부
 - * 대기업, 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유도를 위해 ‘22년 출범
 - 동종·유관 산업 내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대응 전략 공유, 상호 이해력 증진 등을 위한 교류의 장(場) 제공

< ‘23년 협력 네트워크 포럼 계획(안) >

업 종	지 역	주요 내용
산업 공통	서울	• 공시, 금융, 책임투자 등 주요 이슈
반도체·이차전지	경기, 충남 등	• RBA, Drive Sustainability, EcoVadis 등 산업별 이니셔티브, 평가기관의 주요 평가항목 공유
석유화학·정유	전남, 울산 등	
자동차·조선·기계	광주, 경남 등	
바이오·제약	충북, 강원 등	
화장품·식품	경기, 경북 등	• 업종별 주요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 방안 및 현황 공유
에너지	전북, 전남 등	

- (환경 실무협의체) Scope3* 등 공급망 환경 이슈에 대한 산업계 현황 및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23.下~) 환경부
 - *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산정

V. 향후 추진계획

정책과제	부처	일정
1. 진단·컨설팅 강화		
① 컨설팅 제공		
- 업종별 컨설팅, 실사대응 컨설팅	산업부	'23년~
- 분야별 컨설팅	환경부, 고용부	'23년~
- 민간 연계	중기부	'24년~
② 수준진단 고도화	중기부	'23.下
③ ESG 인식 확산	중기부, 환경부	'23년~
2. 정보기반 마련		
① 실사대응 플랫폼 구축	산업부	'24년~
② 정보 활용성 제고		
- 기존정보 정비, 추가 정보제공	산업부	'24년~
- 플랫폼 정비 로드맵 수립	기재부	'24년~
-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	'24년~
③ 맞춤형 가이드언스 제공		
- K-ESG 가이드라인, 대응 가이드북	산업부, 환경부	'23년~
- 경영안내서 제작	중기부	'23.下
- 해외 법·규정 번역	산업부	'24년~
3. 인력·자금여건 개선		
① 종합지원단 운영	중기부	'24년~
② 대응인력 양성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23.下~
③ 금융지원	중기부, 환경부	'23년~
4.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① 협업기반 조성		
- 공동대응 프로세스 구축	중기부	'23년~
- 상생협력 MOU	환경부	'23년~
- 원하청 상생협력	고용부	'23년~
② 네트워크 운영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23.下~